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과 기대효과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윤호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들어가며

2015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고유의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고, 미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은 8개 장과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한옥의 진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옥등건축자산법」 제7조에서는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이행사항으로 위임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건축자산의 기록·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정보체계는 건축자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 정보 허브로서 건축문화 진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건축물 기록·관리 중요성 인식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자산 정보체계 운영

건축자산 정보체계(Architecture Asset Information System)는 건축물의 속성 정보인 1차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수집된 정보의 분석·가공을 통해 2차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목적에 맞게 최종 서비스하는 일련의 플랫폼이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수집·기록·관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을 의미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 법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건축물 기록 관리에 대한 논의는 2000년을 전후하여 학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한 건축 관련 아카이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대표적 사업으로 목천건축아카이브를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김중업 건축박물관, 한국건축가협회의 현대건축 아카이브 등을 들 수 있다.

2007년 건축·도시공간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자산 정보체계 수립을 위한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건축·도시정책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정보체계는 도시명소, 국내 주요 건축자산 정보를 연구소에서 직접 수집하여 구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정보의 생산과 구축·유통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원시적 정보체계라 할 수 있다.

건축자산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원은 정보 특성상 공공이 많아 이에 대한 정보 이용권한을 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4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내 주요 건축상을 주최하는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 한옥공모전, 공공건축상 대상, 신진건축사대상 등 주요 건축자산에 대한 정보의 이용권을 득하고 2016년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문화제의 주요 수상작에 대한 이용권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보하였다. 이렇게 원시적 자료수집 방식의 체계화를 통해 본격적인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도로 공공 분야 건축자산에 대한 정보체계가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인 아우름(www.aurum.re.kr)에는 11개 유형의 건축상, 총 2,214개(2017년 5월 기준) 수상작 정보가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자산 온라인서비스 화면

자료: www.aurum.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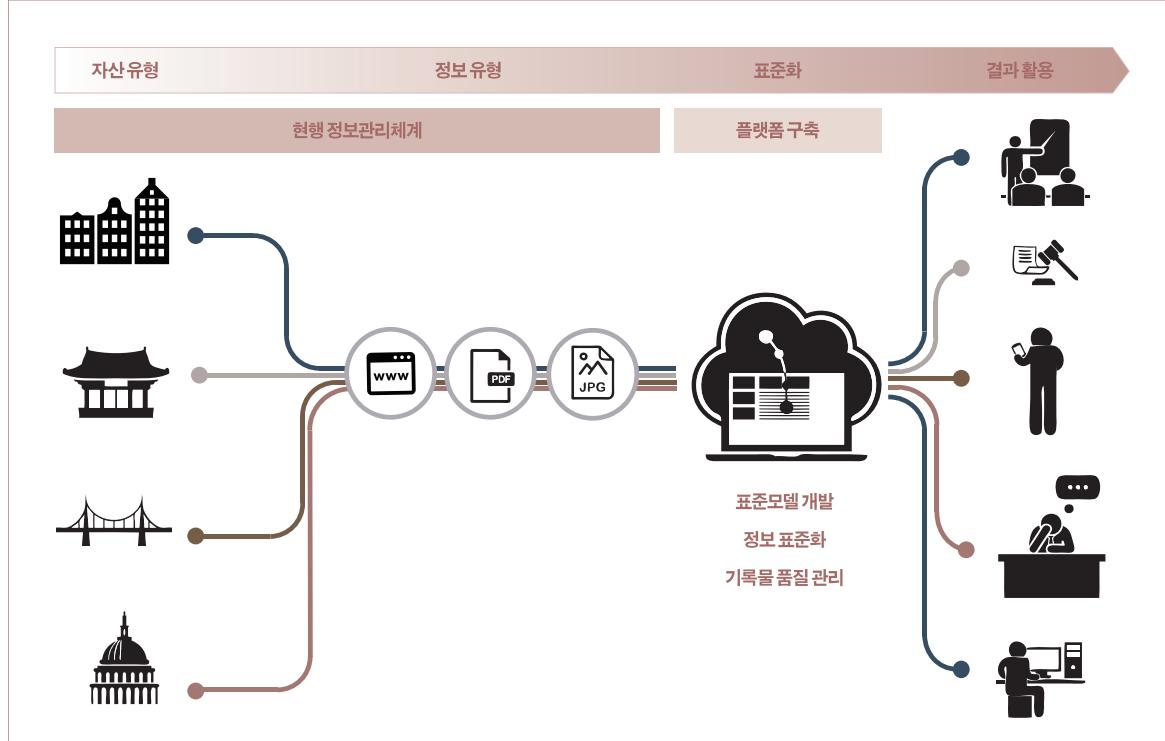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의미와 목적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사업은 2000년을 전후하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조사사업 결과는 국내 건축자산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정보이지만, 결과물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체계 부재로 조사 당시의 결과물이 현행화되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졌다. 또한 조사 주체가 조사 결과를 디지털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자료가 멸실·누락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협의적 의미는 조사된 건축자산 정보의 누락과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결과를 디지털로 저장 관리하는 정보화를 지칭한다. 광의적으로는 구축 정보 분석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체계를 포함하여 정보의 수집·가공·분석·서비스라는 일련의 플랫폼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요즘 건축자산 정보체계는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광흠 외(2007), 「건축도시공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 등 다수

**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1999),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2002~2005),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일제조사사업(2005~2008),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1999~2003), 충남의 건축(1999) 등 중앙과 지자체에서 지역 건축자산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사업이 이루어졌다.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목적은 ▲첫째, 자료를 수집하고 ▲둘째, 자료를 디지털화 및 표준화하며 ▲셋째, 표준화한 정보를 정책·연구·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정보의 수집·가공·분석·활용 과정이 자동으로 순환되는 ‘정보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정보 흐름이며, 건축자산 정보체계 각각의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배경

2015년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시행으로 광역자체의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자산 정보

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개발한 건축자산 정보체계 시스템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매뉴얼〉을 2016년에 공동 발간하였다.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건축자산 정보시스템 관리항목이 해당 법령의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없고,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에서 각 지역의 건축자산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2016년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특히 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경우 정부 예산 절감, 주요 정책목표

의 효율적 달성, 이미 구축된 데이터 공동 활용, 데이터 표준화, 부처 및 지역 간 정보 소통과 협업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되었다.

추진 과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 4월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였다. 시범 사업 공모 시 해당 지역의 건축자산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자산 보유 현황을 검토한 후 서울시·경기도·전라남도(목포·영암)를 최종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등 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목포시와 영암군은 건축자산 조사 및 한옥을 활발히 조성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요 내용

- 건축자산 공동 활용 시스템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모델을 개발해 왔다.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자산 기초조사 양식을 기반으로 해당 모델을 고도화하여 시범사업에 사용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 자료 신규 등록 화면 예시

할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건축자산 신규 등록, 건축자산 검색, 건축자산 수정·삭제, 광역건축자산 지정, 우수건축자산 선정이며, 주요 데이터 항목은 정리번호·명칭·주소·용도 등 건축자산 기초조사 양식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건축자산 입력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목록조사, 기본조사, 심층조사 3단계로 구분하고 건축자산 기초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자료(관련 보고서, 수상이력, 도면 등)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건축자산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교육은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와 활용, 자료의 수집·가공·입력 및 관리, 콘텐츠 기획·개발, 관련법에 대한 실무자 이해도 제고 등 건축자산 정보체계 전반에 대한 실무자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각각의 교육은 사업의 단계별 이행 시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며, 통상적인 공무원 교육보다는 세미나·회의·자문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요량이다.

- 보유 자산 정보의 현행화

보유 자산 정보의 현행화는 건축자산 정보의 디지털화 및 목록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정보 수집, 아날로그 정보의 디지털화, 수집 정보의 분석·가공을 수행한다. 또한 정보 통합을 위한 정보 이관 및 자료 통합,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제6조에서는 건축자산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지자체 보유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화하고,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아카이빙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건축자산 정보시스템 정보 현행화 절차



있는 건축상수상작 정보와 한옥 정보,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정보를 건축자산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여 통합할 예정이다.

- 수집 자료 분석을 통한 건축자산 콘텐츠 기획·개발

건축자산 활용 콘텐츠는 일반 대중을 위한 홍보 콘텐츠와 정책이나 시책 발굴을 위한 정책 콘텐츠로 구분 할 수 있다. 홍보 콘텐츠는 지역명소와 자산정보를 활용한 건축자산 홍보책자나 건축테마지도 등이 있으며, 건축자산 위치정보를 활용한 건축문화진흥구역 후보지 선정과 지역별 통계정보 생성 등이 정책 콘텐츠에 해당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과 중앙부처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획·개발할 예정이다.

- 사업 모니터링 및 시스템 운영·관리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백업 등의 시스템 운영·관리와 시범사업의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사업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이 시범사업에 서 발전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 활용하고, 지

속 가능성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모니터링과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의 법정의무화는 공공에서 건축자산 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카이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시행으로 지자체에서는 법정업무를 이행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정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법적 세부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운영할 경우 정보의 표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동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유형·형태·단위 등을 표준화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학술 연구, 정책 발굴, 국가 통계 개발에 필요한 원천자료의 표준화를 의미하며, 정제되고 통일된 정보의 활용은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건축자산 정보 생산에 기여 할 것이다.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초기 시스템 개발 비용은 광역지자체별로 5억 원 내외, 매년 유지·관리 비용은 3~4억 원으로 추산되며,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된다. 이를 통합 개발·운영할 경우 전체 지자체에 소요 예산의 약 8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개발 비용만 하더라도 70억 원 이상의 감축이 예상되고, 매년 최대 60억 원의 운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역시 절감할 수 있다.

정보체계 공동 활용을 통한 인접지역 간의 건축자산 연계활용이 가능하고, 중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정보체계를 통해 맞춤형 정책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구축정보를 공개하여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축자산 정보의 생성에서부터 소비까지 건전한 정보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며

현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는 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전남·경북·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다(2017년 4월 기준). 그러나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은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법률에서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상위법과의 불일치 조항이 발생한 것이다.

건축 아카이브는 일상의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기억으로 아카이브의 부재는 건축·도시공간의 기억상실을 의미한다. 이번 정보체계의 구축은 건축·공간 환경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삶터를 풍요롭게 하는 근원이다. 이제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건축자산 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삶의 일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산관리 주체이자 업무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